

See discussions, stats, and author profiles for this publication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8748282>

논문 발표 후 연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논문 발표 후 연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Article in *Economy and Society* · December 2019

DOI: 10.18207/criso.2019..124.192

CITATIONS

0

READS

2

2 authors, including:



Tay Jeong

19 PUBLICATIONS 16 CITATIONS

SEE PROFILE

##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는가? :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 언론의 인용보도 왜곡 실태 분석

Did the US Guarantee the 'Regime' of North Korea? : A Study of Systematic Citation Errors in South Korean News Media

---

저자 (Authors)	테이 정, 정충교 Tay Jeong, Jeong, Choong Kyo
출처 (Source)	<a href="#">경제와사회</a> , 2019.12, 192-220(29 pages) <a href="#">ECONOMY AND SOCIETY</a> , 2019.12, 192-220(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비판사회학회</a>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928421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9284216</a>
APA Style	테이 정, 정충교 (2019).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는가? :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 언론의 인용보도 왜곡 실태 분석. <i>경제와사회</i> , 192-220
이용정보 (Accessed)	강원대학교 192.203.***.137 2020/08/18 07:5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는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 언론의 인용보도 왜곡 실태 분석

테이 정(Tay Jeong)\* · 정충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급할 보상의 개념과 그를 지칭하는 용어는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정립된다. 제3기에 해당하는 2018년 6월 이후 용어는 'security guarantee', 객체는 DPRK로 공식화되는 것을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그동안 협상 당사자들이 사용한 이 용어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원발언에 없는 '체제'라는 개념을 임의로 덧붙인 보도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24개 주요 중앙지, 경제지, 방송사의 보도 패턴을 분석했으며, 특히 제3기 외국 고위인사들의 'security guarantee'라는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외신 보도와 비교해 인용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018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지급할 보상은 무엇인가?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security

\* 맥길대학교 사회학과, jeong.tay@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ckjeong@kangwon.ac.kr

DOI: <http://dx.doi.org/10.18207/criso.2019..124.192>

assurance” 혹은 “security guarantee”[조선어: 안전 담보]라고 일컫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 이 용어를 “안전 보장” 대신 임의로 “체제”라는 단어를 삽입해 “체제 보장” 및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인용함으로써 의미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빈도와 추세를 분석해 오류를 드러낸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급할 보상의 개념과 그를 지칭하는 용어가 협상 당사자 및 주변 관련국들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지금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이를 밝힌다. 짧게 요약하자면, 2018년 2월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나 “체제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이후에 비로소 북-미 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안전 보장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미국 측 고위인사들이 북-미 협상 초기에 안전 보장의 대상이 북한의 체제(regime) 및 정권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협상이 진척됨에 따라 미국 정부 내에서 이내 개념과 용어가 정리되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guarantee)’으로 굳어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리들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체제 보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 고위층의 말을 간접인용하면서도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국 정부가 “체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이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가 사용하는 “security assurance” 혹은 “security guarantee”를 한국어로 인용할 때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체제”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끼워 넣는 행태는 마땅한 비판의 대상이다. 잘못된 인용이 개념적 혼선을 불러일으켜 명백한 틀린 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게 발견된다. ‘체제’라는 표현이 부당하게 추가된 인용 기사들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 연구 뒷부분의 주된 과제다.

이 글은 첫 번째 절인 서론을 포함해 모두 여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자료 수집과 정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2018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급할 보상에 대한 개념과 용어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각 시기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추적할 것이다. 네 번째 절에서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과 북한 및 주요 관련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안전 보장” 내지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로 전언한 한국 언론기사들을 분석할 것이며, 다섯 번째 절에서는 영, 러, 중, 일 외신기사와의 대조를 통해 한국 언론의 인용보도 행태가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간단한 비판과 함께 마무리한다.

## 2. 자료수집 및 정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정제해 기초데이터를 마련했다. 2017년 7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지, 경제지 및 방송사 24개 뉴스 기사를 “북한 AND (안전 OR 보장)”의 검색식으로, 분야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로 제한하고 검색해, 모두 3만 3188개의 기사를 추출했다. 검색 결과에는 각 기사의 출판일, 출판언론사, 기사제목, 기사의 인터넷주소(url), 기사 본문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사마다 빅카인즈가 관리하는 뉴스식별자가 붙어 있다. 검색 결과 중 중복된 기사 1430개와 기사의 인터넷주소(url)가 없는 기사<sup>1)</sup> 2446개를 제외한 2만 9312개의 기사 원문을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다. 그중 190개 기사는 기술적 문제로 내려받는 데 실패했고,<sup>2)</sup> 나머지 2만 9122개의 기사 본문을 수집했다.

- 1) 검색 결과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인터넷주소가 없는 기사는 네 개의 언론사에서만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1911개 중 757개(39.6%), 《한국경제》 1184개 중 361개(30.4%), 《문화일보》 918개 중 818개(89.1%), 《아주경제》 825개 중 508개(61.6%)가 해당되었다. 이 네 언론사의 기사 전체를 제외하는 대신, 인터넷주소 누락 여부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가정하에, 인터넷주소가 있는 모든 기사를 기초데이터로 삼았다. 따라서 이 네 언론사의 경우 분석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주소가 없는 기사들의 출판시간 분포, 언론사별 분포, 각 기사의 출판일자, 언론사 이름, 기사제목 목록은 <데이터 3>에 있다.
- 2)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언론사 홈페이지로부터 기사 본문을 내려받는 데 실패한 기사는

〈표 1〉 기사 수집, 정제, 관심기사 선별 결과

	기준시점 전 기사		기준시점 이후 기사		전체 기간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합	전체 비율
관심기사	528	6.0%	6,680	32.8%	7,208	24.8%
관심밖기사	8,213	94.0%	13,701	67.2%	21,914	75.2%
합	8,741	100.0%	20,381	100.0%	29,1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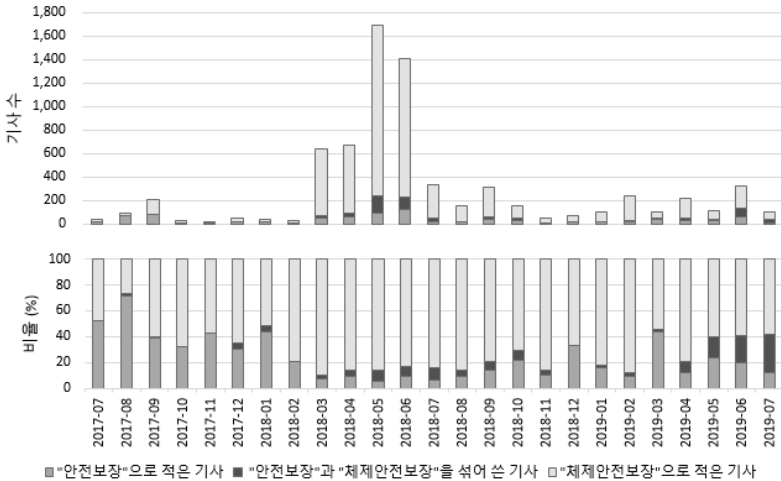
본문을 내려받은 기사들을 컴퓨터로 분류해 그중 7208개의 관심 기사를 추출했다. 관심기사란 현재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안전(또는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로 정의했다. 단, 2018년 3월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 자격으로 방북 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브리핑을 하기 (기준시점) 전까지는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체제 또는 안전의 보장이라는 말이 북한 및 북한 정권에 대해서 쓰인 모든 기사를 관심기사로 정의했다.

관심기사와 관심밖기사로 분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1>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다룬 원시데이터, 중간가공데이터, 최종산출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할 수 있다. <데이터> 목록은 이 논문 맨 뒷부분 참고문헌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데이터에 들어 있는 뉴스식별자는 빅카인즈가 사용하는 기사별 고유번호인데 각 뉴스식별자에 해당하는 기사 원문은 <데이터 5>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표 1>은 컴퓨터가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준시점 전에 비해 기준시점 이후에 관심기사가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한 7208개의 관심 기사를 대상으로 여러 분석을 수행했다. 컴퓨터가 관심기사와 관심밖 기사를 올바르게 구분해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가 관심기사로 분류한 기사들과 관심밖 기사로 분류한 기사들로부터 무작위 추출 표본을 만들고 표본의 기사들이 올바

《파이낸셜뉴스》에 집중되었다. 657개 중 148개(22.5%)를 내려받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내려받은 나머지 509개의 기사도 기초데이터에 포함시켰다. 내려받기에 실패한 기사들의 출판시간 분포, 언론사별 분포, 각 기사의 출판일자, 언론사 이름, 기사 제목, 인터넷주소 목록은 <데이터 4>에 있다.

<그림 1>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언급한 기사(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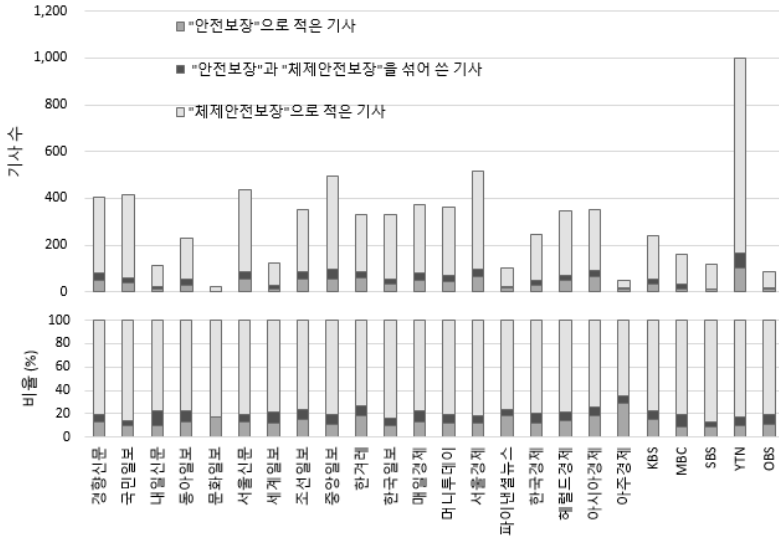


르게 분류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컴퓨터 분류기의 성능을 추정했다. 기준시점 전 기사에 대해서는 96%의 민감도와 특이도, 기준시점 이후 기사에 대해서는 92%의 민감도와 98%의 특이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2>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7208개의 관심기사 중 기사 본문에서 ‘체제 보장’ 혹은 ‘체제 안전 보장’과 같이 ‘체제’가 포함된 용어만을 사용한 기사, ‘안전 보장’, ‘안전담보’, ‘안보보장’ 등과 같이 ‘체제’가 포함되지 않은 용어만을 사용한 기사, 그리고 두 가지 용어를 섞어 쓴 기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했다(띄어쓰기 등 구문적 변형을 모두 고려했다). 이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므로 따로 분류 성능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림 1>은 세 범주의 기사 수와 비율을 월별로 살펴본 것이고, <그림 2>는 이를 언론사별로 살펴본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2018년 3월 이후, 언론사별로는 모든 언론사가 ‘체제’를 포함한 용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을 전후한 시기에 관심기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었음도 볼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분류와는 별개로 연구자들은 정밀한 분석과 중요 발언의 식별

<그림 2>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언급한 기사(언론사별)



(4절에서 더 정밀히 분석)을 위해 관심기사 7208개를 모두 직접 읽어보았다.<sup>3)</sup>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급할 보상의 개념과 그를 지칭하는 용어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정립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미국의 보상 개념과 지칭 용어의 단계적 정리

#### 1) 제1기. 2018년 2월 이전: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시기는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지급할 보상을 지칭하는 말이 있을 수 없다.

3) 중요 발언 목록과 원문 링크는 <데이터 7>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및 ‘정권’이라는 인식은 한국 측 고위인사들의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뿐만 아니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데도 합의했다”라고 했으며 2017년 9월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미국 측에서도 2017년 8월 1일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We do not seek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a collapse of the regime”이라고 발언하며 북한의 “regime”을 직접 지칭하고 그를 전복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했다. 반면에 이 시기 러시아의 고위인사들은 “체제”라는 말이 없이 북한이 ‘안전’ 내지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표현했다.<sup>4)</sup>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이 시기 한국 언론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 및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드물게 쓰는 경우, ‘안전 보장’과 ‘체제 보장’이 이후 시기보다 더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제2기.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북-미 협상의 시작과 개념 및 용어의 혼선

이 시기에는 북-미 협상의 윤곽이 미국 고위인사들의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발언 등에서 엿보이기 시작한다. 미국이 협상 상대에게 지급할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개념이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그를 지칭하는 용어도 몇 가지로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힐러슨 전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저 ‘assurance’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가운데 ‘security assurance’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다. ‘체제 (안전) 보장’의 직역 격인 ‘regime (security) assurance’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의 객체가 북한의 regime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출현하지만 뚜렷하게

4) <데이터 7> E1.2, E1.3 참조.

일관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시기 “He is thinking at the sustainment of his regime”, “assuranc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he assurances that it [주: his regime] need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리비아와 대비하며 “in Libya we decimated the country”라고 하면서 안전 보장의 객체가 country임을 암시했으나 뒤이어 “There was no deal to keep Gadhafi. This would be with Kim Jong Un, something where he’d be there”라고 발언하며 김정은 정권의 보전을 이야기했다(자세한 정리는 <데이터 7> 참조). 반면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이 미국 측에게 협상에서 요구할 것을 아직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미국 인사들의 발언이 있기 전, 한국에서는 3월 6일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 후 귀국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라고 전언했다.<sup>5)</sup> 이 시점부터 한국 언론에서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표현의 절대 사용 빈도 및 ‘안전 보장’에 비한 상대적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Assurance’ 내지 ‘security assurance’라는 표현이 들어간 발언의 직·간접 인용문에서도 ‘체제 보장’ 및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표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 3) 제3기.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15일 현재까지: 개념과 용어의 정립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만나 공식 합의문을 내놓으면서, 이번 북-미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에게 지급할 보상이 명문화된다. 미국이 북한에 지급할

---

5) 이 글의 주제 밖이지만, 정의용 특사단이 면담한 ‘북측’이 ‘체제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정말로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에게 자신들의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체제 내지는 정권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 표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북한은 그 어떠한 공식 발표에서도 안전 담보의 객체를 자신들의 ‘체제’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제4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독자들이 확인하기 힘든 원발언을 인용할 때 임의로 ‘체제’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경향이 한국 언론과 정계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대가가 영어로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라고 표현되면서 용어는 “security guarantee”, 객체는 DPRK로 공식화된다. 이후 미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에서 ‘security guarantee/assurance’라는 용어가 굳어지고, 보장의 객체가 북한의 ‘regime’이라는 내용의 발언도 하지 않게 된다. 사실 이러한 패턴은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 전부터 뚜렷하게 관찰된다. 정권 및 레짐을 언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안전 보장의 객체가 북한이나 북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sup>6)</sup> 북한의 관리들도 공식 발언에서 싱가포르 합의문에 명기된 ‘안전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시기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인사들이 북-미 협상에 대해 빈번하게 발언하게 되는데, ‘체제’라는 표현 없이 ‘안전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러시아 고위인사들의 경우 ‘안전 보장(га р а н т и и б е з о п а с н о с т и)’과 ‘보장(га р а н т и и)’을 한 발언 속에서 섞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sup>7)</sup>

협상 당사자들과 주변국들의 고위인사들은 ‘안전 보장’으로 용어를 통일했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체제 보장’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한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체제’를 삽입한 표현과 하지 않은 표현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한국 언론에서 쓰이는 용어의 통시적 추세

<그림 1>에 나타나듯이, 관심기사 중 ‘안전 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인 기사의 비율은 제2기와 제3기 초반 세 달 정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그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제3기 이후 북-미 협상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에 ‘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인식이 조금씩 퍼진 결과일 것이

6) <표 2> 참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있다. E3.6 “security assurances to North Korea and its peopl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 North Koreans need”; E3.3 “security assurance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s”; E3.15 “We’ve got to make this bett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need are in place”.

7) 자세한 정리는 <데이터 7>의 E3.7, E3.10, E3.11, E3.12, E3.13 항목 참조.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 시기인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 동안 “안전 보장”과 “체제 보장”이 둘 다 쓰인 기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림 2>로부터 언론사 간 사용하는 용어의 비율이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춰 이 용어의 사용 비율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추측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관계없이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논하자면, 《아주경제》와 《한겨레신문》이 ‘안전 보장’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이 언론들에서도 역시 ‘체제 보장’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Security assurance to the DPRK”라는 용어가 명문화된 싱가포르 합의문 이후의 시기로 좁혀서 살펴봐도 용어 사용 비율에서 언론사 간에 별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안전 보장’이 들어간 기사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증가했을 뿐이었다.

#### 4. 발언 인용기사 분석

제3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유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 및 문건을 ‘안전 보장’ 내지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인용한 한국 언론기사들을 모두 추출했다.<sup>8)</sup> 여섯 개 이상의 기사에서 인용된 발언들을 찾을 수 있는 대로 모아 <표 2>와 같이 15가지로 정리했다.<sup>9)</sup>

- 
- 8) 인용된 발언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관심기사 전체를 연구자가 눈으로 모두 읽어보는 방법을 사용했다. 각 발언에 해당하는 인용 기사를 추출하는 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분류와 직접 읽어보기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 9) 외국이 아닌 한국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는 제외했는데, 이는 한국어의 경우 언론사를 막론하고 인용을 왜곡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 보장’이라는 말을 썼으면 ‘안전 보장’으로,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썼으면 ‘체제 보장’으로 정확하게 인용했다. 또한 제3자(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가 외국 고위인사

3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 외국의 고위인사들은 ‘체제(regime)’라는 말이 들어 가지 않은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guarante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표 2> 한국 언론에서 많이 인용한 미국, 북한, 러시아, 중국 고위인사의 발언 및 문건

식별기호	날짜	이벤트	원문에 사용된 용어*	인용기사수
E3.1	2018.06.07	폼페이오 백악관 브리핑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주: the North Koreans] are demanding; security assurances that it [주: North Korea] needs	14
E3.2	2018.06.08	폼페이오 NHK 인터뷰	security assurances for the DPRK	13
E3.3	2018.06.11	폼페이오 언론 브리핑	security assurance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s	28
E3.4	2018.0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합의문	[영]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	141
E3.5	2018.06.18	Detroit Economic Club 폼페이오 발언	security assurances that Chairman Kim needs	29
E3.6	2018.07.08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 폼페이오 발언	security assurances to North Korea and its peopl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 North Koreans need	17
E3.7	2018.09.12	동방경제포럼 푸틴 발언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арантии	11
E3.8	2019.02.28	리용호 외무상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	안전 담보	53
E3.9	2019.03.26	미 국무부 대변인 로버트 팔라디노 발언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it [주: North Korea] seeks	8
E3.10	2019.04.25	북-러 정상회담 뒤 푸틴 단독 기자회견	гарантии своей [주: 북한의] безопасности;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гарантий	130
E3.11	2019.05.13 ~ 05.14	러시아 소치 1) 중-러 및 2) 미-러 외교장관 회담 뒤 라브로프 기자회견 발언. 또 3) 폼페이오-푸틴 회담 뒤 우샤코프 러시아 대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18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을 한국 언론이 재인용한 경우도 제외했는데, 이는 한국 언론이 ‘안전 보장’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외국발 발언을 체계적으로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신이 외국 고위인사의 말을 인용한 것을 한국 언론이 재인용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발언		
E3.12	2019.06.05	중-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러]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중] 安全与發展	6
E3.13	2019.06.07	세계경제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 본회의 푸틴 발언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аранты	8
E3.14	2019.06.20	애틀랜틱카운슬 비건 발언	security guarantees	13
E3.15	2019.07.12	America First 라디오 프로그램 폼페이오 인터뷰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주: North Korean people] need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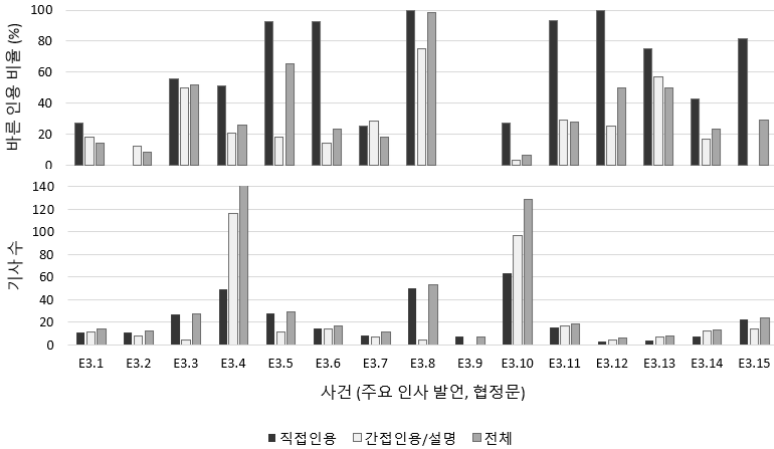
\* 더 자세한 문맥과 원문 링크는 <데이터 7> 참조.

인용문은 인물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옮긴 “직접인용문”과 인물의 발언을 기자의 말로 다시 표현해 전한 “간접인용문/설명문”으로 유형 분류했다(자세한 분류 기준은 <부록 3> 참조). 인용문을 포함하는 기사는 원발언의 “security guarantee/assurance” 및 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및 중국어를 번역하면서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여서 잘못 인용한 기사와, 원문에 나온 대로 바르게 전한 기사,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림 3>은 주요 인사 발언과 주요 문건 15개를 인용한 기사들이 원문을 정확히 인용한 비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직접인용문이 간접인용문/설명문보다 정확한 인용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직접인용문의 경우도 정확한 인용만 들어 있는 기사 비율이 14개의 외국어 발언들에 걸쳐 평균 약 50%밖에 되지 않았다. 직접인용문이 화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접인용문 및 설명문의 경우 정확한 용어로 발언을 전한 기사의 비율이 13개 외국어 발언(14개에서 직접인용문만 있는 E3.9를 제외한 수)에 걸쳐 평균 20%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원발언을 기자의 말로 다시 전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협상의 핵심 단어를 별도의 의미를 가진 특정 단어를 삽입해 변형한다면 책임 있는 보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난다. 가장 많은 발언기사가 나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의 경우 직접인용문이 들어간 기사의 거의 반 정도가 합의문에 없는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끼워 넣어 보도했다. 많은 수의 기사들이 합의문 전문을 번역 게재하면서 유독 “security guarantee”

〈그림 3〉 주요 인사의 발언과 문건을 인용한 기사 중 바르게 인용한 기사 비율(주요 사건별)



라는 부분만 ‘체제 보장’으로 잘못 번역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보도된 사설 및 논평에서는 미국이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경우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sup>10)</sup> 그중 심지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마저 등장한다.<sup>11)</sup>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에 버금갈 만큼 많은 인용기사가 나왔던 2019년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발언의 경우 그가 ‘보장(гарантии)’의 객체를 일관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인용문 기사의 70%, 전체 기사의 94%가량이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여 보도했다.

사실 직접인용문의 부정확성은 단지 외국어로 표현된 원발언에 없는 ‘체제’라는 뜻을 임의로 추가하는 현상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제2기에 해당하는 5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을 전하면서 그가 “CVIG”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지만, 그는 실제로 이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데이터 7> 참조). “북한이 CVID(비핵화)를 한다면

10) 08100401.20180613153204001

11) 01100201.20180614050202001

미국은 북한에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를 하겠다”<sup>12)</sup>;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 보장(CVIG)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논의했다”<sup>13)</sup>;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행하면 미국도 똑같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CVIG)를 해주게 될 것”<sup>14)</sup> 등의 직접인용은 번역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오류이다. 발언의 직접인용마저 이렇다 보니 폼페이오 장관이 “CVIG”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석하는 논평 및 대담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sup>15)</sup> 심지어 CVIG라는 용어가 처음 한국에서 만들어졌음을 언급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에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을 한국 내 담론의 영향력과 관련지은 기사들도 발견된다.<sup>16)</sup>

인용하는 원발언 중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것이 북한 ‘체제’의 보장이라는 인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임의로 삭제하는 보도 행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E3.6 2018년 7월 8일 도쿄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나열한 세 가지 항목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security assurances to North Korea and its people, and finally, denuclearization”을 직접인용함에 있어서 “and its people”을 임의로 생략한 기사가 이 부분을 직접인용한 11개 기사 가운데 7개로 나타났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제3기 발언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조선어)로 된 E3.8 2019년 2월 28일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인용기사들 중에서는 잘못된 인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심문구 직접인용문이 들어 있는 50개의 기사, 간접인용문/설명문이 들어 있는 3개의 기사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의 ‘안전 담보’라는 원발언에 ‘체제’를 임의로 삽입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한국의 독자들이 원발언을 쉽게 읽거나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언을

12) 괄호 안 부분도 기사 내 직접인용문의 일부분이다. 01100101.20180601170606002

13) 02100311.20180530234027001

14) 01100301.20180529130913001

15) 08100101.20180530212639001, 08100401.20180531131013001,

08100401.20180529165402001, 01100901.20180614200559004

16) 01100901.20180614200559004, 08100401.20180531131013001



<표 3> 《연합뉴스》 직접인용문의 정확도와 일반 언론기사 직접인용문의 정확도 간 상관관계

		《연합뉴스》 직접인용문		
		바르게 인용한 발언 7개	틀리게 인용한 발언 2개	섞어 인용한 발언 4개
일반 언론 직접인용문	기사 개수	135개	18개	102개
	바른 비율	83.8%	0.0%	33.7%
	틀린 비율	9.8%	100.0%	60.7%
	섞은 비율	6.4%	0.0%	5.6%

있는 그대로 전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제’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 보장 및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한 직접인용문의 정확도가 간접인용문/설명문의 정확도에 비해 인용된 발언 간에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sup>17)</sup> 직접인용문의 경우 틀리거나 부자연스러운 번역까지도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이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누군가가 한번 발언을 직접인용하면 많은 언론사들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베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뉴스통신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외국어 발언을 직접인용하는 경우 뉴스통신사의 기사 작성자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에 따라 일선 언론기사들의 직접인용문의 정확도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진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북한 관련 오보의 진원지인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따라(김창룡, 2018),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발언별 직접인용문의 정확도와 일반 언론기사 인용문의 정확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일반 언론사가 직접인용문을 바르게 인용한 경우와 잘못 인용한 경우의 비율이 《연합뉴스》가 제공한 직접인용문이 바른지 그렇지 못한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접인용문의 경우 <표 4>에

17) 14개 발언에 걸쳐 바른/틀린/섞인 인용 기사 비율의 표준편차를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직접인용문 포함 기사				간접인용문/설명문 포함 기사			
	바른	틀린	섞인	계	바른	틀린	섞인	계
평균(%)	51.0	43.6	5.4	100	21.0	71.1	7.9	100
표준편차	0.36	0.37	0.07		0.16	0.19	0.08	

<표 4> 《연합뉴스》 직접인용문의 정확도와 일반 언론기사 간접인용문의 정확도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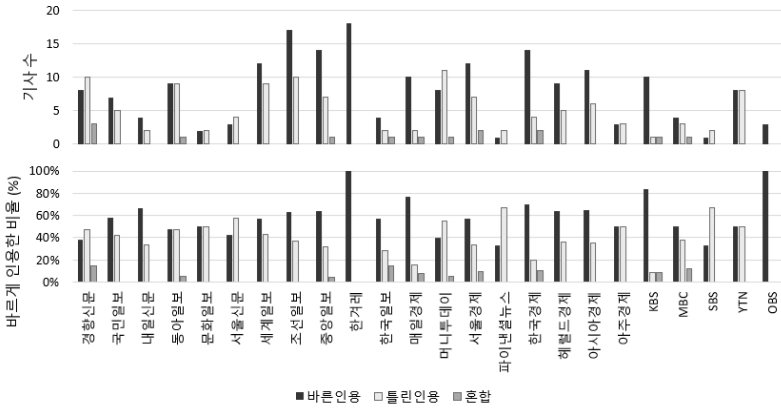
		《연합뉴스》 직접인용문		
		바르게 인용한 발언 7개	틀리게 인용한 발언 1개	섞어 인용한 발언 4개
일반 언론 간접인용문	기사 개수	183개	8개	119개
	바른 비율	23.5%	12.5%	25.0%
	틀린 비율	62.1%	87.5%	74.5%
	섞은 비율	14.3%	0.0%	0.5%

나와 있듯이 《연합뉴스》의 원발언 번역이 ‘안전 보장’, ‘체제 보장’, 혹은 두 가지 모두로 된 세 가지 경우에 걸쳐 일반기사의 용어 사용 패턴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가 정확한 직접인용만을 한 경우 ‘체제 보장’만을 쓴 일반기사의 비중이 다른 두 가지 경우에 비해 다소 줄고, 대신 ‘안전 보장’과 ‘체제 보장’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한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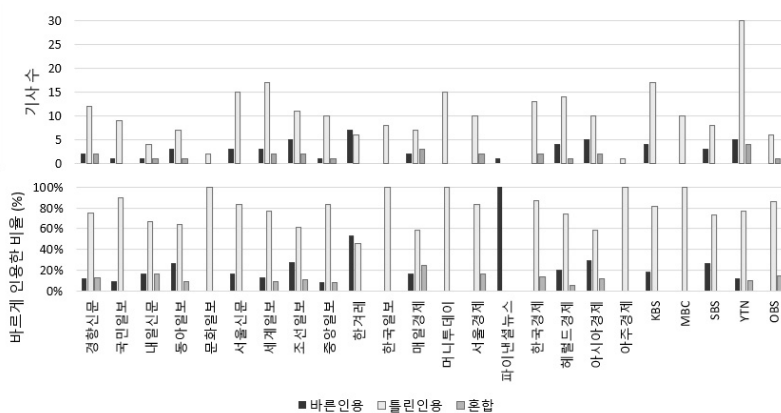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한국 언론을 통째로 묶어 분석했는데, <그림 4>와 <그림 5>는 바르게 인용하는 정도를 언론사별로 보여준다. 언론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전체 관심기사(<그림 2>)와는 달리, 제3기 발언 인용기사에 한정해서 살펴본 결과 일부 언론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8) 《연합뉴스》의 보도가 일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주장을 단순한 상관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인과적 주장이 가능하다. A와 B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인과관계 없이 우연의 일치로 상관관계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면 A와 B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공통된 원인이 있는 경우밖에 없다(Tucker, 2004). [사실 이 밖에 공통 결과(common effect, collider)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Greenland and Pearl, 2008) 이 주제와는 연관성이 없다.] 《연합뉴스》와 일반 언론기사의 용어 사용 정확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수(즉, 공통 원인)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해 보자면, 1) 시기적인 유행, 2) 원발언 자체의 내용이 있겠으나, 1)은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발언들도 정확도가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2)는 바른 인용 비율이 높은 발언들과 비율이 낮은 발언들 사이에 그 차이를 설명할 만한 내용상의 차이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된다. 결국 직접적인 인과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발언에 대한 인용보도에서 일반 언론기사가 뉴스통신사의 보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그 반대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림 4〉 주요 인사의 발언과 협정문을 직접인용한 기사(언론사별)



〈그림 5〉 주요 인사의 발언과 협정문을 간접인용한 기사(언론사별)



《한겨레신문》으로, 직접인용문 기사 18개 전부에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했다. 간접인용문/설명문의 정확도 역시 바른 인용이 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관심기사 전체에 대한 분석(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시기)에서도 ‘안전 보장’이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약간 높았던 만큼, 적어도 ‘안전 보장’ 및 ‘체제 보장’에 관한 용어 사용 문제에서는 주요 한국 언론사들 가운데 가장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경제지들은 중앙지와 방송사에 비해 직접인용문의 정확도가 약간 높았으나 간접인용문/설명문에서는 다른 언론 유형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념성향별로는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 5. 외신과의 비교

앞 절에서는 한국 언론이 북-미 협상에서 쓰이고 있는 “security assurance/guarantee”라는 용어가 들어간 발언 및 문서를 인용보도하는 데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다른 나라의 언론보도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번 절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사가 나갔으며 외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E3.4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전한 영, 러, 중, 일 외신기사들을 살펴본다.

충실하게 분석을 하자면 한국 기사를 가지고 한 것처럼 외국 언론에 실린 인용기사들을 모두 수집해 통계를 내야 하겠으나, 연구자들의 자원이 부족해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다. 각 언어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웹에서 검색해 관심문구가 인용되어 있는 기사들을 위에서부터 10개 추출한 뒤,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검색엔진은 각 언어를 쓰는 대표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것을 이용했다(영, 러는 구글, 중은 바이두, 일은 야후 채판). 검색에 쓰인 키워드는 영어 ‘US-DPRK summit joint statement’, 러시아어 ‘Саммит США-КНДР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중국어 ‘朝美首腦會晤 聯合公報’, 일본어 ‘米朝首腦會談 共同聲明’이다. 기본적으로는 각 언어를 쓰는 대표국의 언론사로 한정해서 살펴보되, 영어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고려해 언론사

---

19) 직접인용문의 OBS, 간접인용문/설명문의 《파이낸셜뉴스》는 표본 크기가 작아 평가하기 어렵다.

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추출했다. 영어의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언론이 6개, 영국 1개, 호주 1개, 싱가포르 1개, 일본 1개(The Diplomat)가 포함되었다.<sup>20)</sup> 검색 기간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일주일 뒤인 6월 18일까지로 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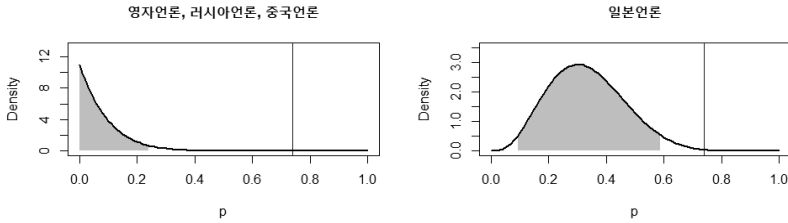
영자 언론, 러시아 언론, 중국 언론에서는 잘못된 인용을 포함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본 언론에서는 3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영자 언론은 논조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및 비판이 한국 언론 이상으로 강하게 느껴졌지만 명백하게 왜곡된 전언을 찾을 수는 없었다. 러시아 언론기사들은 비교적 북한에 우호적인 어조였으며, 원발언을 전함에 있어서 ‘북한’ 대신에 ‘평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될 뿐 ‘체제’ 등의 단어를 삽입해 왜곡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중국 언론은 10개 기사 가운데 2개의 기사에 ‘체제 보장’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 이 용어가 2018년 6월 중순 당시 비교적 낮은 빈도이나 중국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두 기사에서 ‘체제 보장’이라는 말이 쓰인 문맥이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합의문속 관심구절에 대한 전언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인용이 포함된 기사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검토한 네 가지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원 문장에 ‘체제’라는 용어를 임의로 덧붙여 인용한 문구들이 있는 기사들이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3개 기사 가운데 하나는 직접인용문이 왜곡된 기사였다.

이 정도 표본으로 각 나라(및 언어) 언론보도 행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국 언론이 관심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삽입하는 실제 빈도가 외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일 수는 있다. 그를 위해 베이지안 통계를 이용해 관측된 표본 데이터와 사전확률분포로부터 모집단 내 왜곡된 전언이 있는 기사의 비율  $p$ 의 분포를 추정했다. 원발언의 관심문구를 있는 그대로 인용했는지, ‘체제’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여서 전언했는지가 기사가 검색엔진에서 얼마나 상위에 나타나는지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균일한 사전확률(Uniform Prior)을 가정해서  $p$ 에 대한 사후확률밀도 분포와 95% 최고사후밀도구간(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을 구하면 <그림 6>과 같다.<sup>21)</sup> 세로

20) 자세한 방법론과 개별 기사 링크는 <데이터 8>에 있다.

21)  $\beta_{a,b}(x) = \frac{1}{\beta(a,b)} x^{a-1} (1-x)^{b-1}$ 로 정의되는 베타 확률밀도함수에서 앞의 그래프는

〈그림 6〉 10개 표본기사 검토 후 왜곡된 전언이 있는 기사 비율의 사후확률밀도



선은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대한 인용이 있는 한국 언론기사 가운데 ‘체제’라는 말이 임의로 추가된 인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비율을 나타낸다(약 0.738).

잘못된 인용이 발견되지 않은 영자 언론, 러시아 언론, 중국 언론에 비해서는 물론, 적잖은 왜곡이 보이는 일본 언론에 비해서도 잘못된 인용이 포함된 기사의 비율이 거의 확실하게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6. 비판 및 결론

한 나라의 정권이 큰 나라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국가나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와 고위관료들은 미국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미국의 담당자들도 북한에게 비핵화 시 체제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도 북한의 지도자와 수 시간 회담한 후 그가 단지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이 국제정치적 현실이 아닌 한국 언론이 만들어낸 서사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수부터 진보까지 정치 스펙트럼을 막론하고 한국의 모든 중앙지, 경제지, 뉴스 방송사가 이 서사에 참여했다.

2018년 6월 이후 협상의 당사국 및 주변 관련국들의 최고위 담당자들 사이에

---

a=1, b=11, 뒤의 그래프는 a=4, b=8로 산출된다.

서 사실상 언급되고 있지도 않은 ‘체제 보장’이라는 개념이 언론기사에서, 그것도 인용보도에서 1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답은 데이터에 기반한 별도의 실증연구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나, 간단한 개념적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우선,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언론 종사자들이 인용보도를 정확하게 했으면 애초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도 원칙에 무책임한 언론 관행이 필요조건으로 작용했음을 무리 없이 인정할 수 있다.<sup>22)</sup> 또한, 이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패턴의 인용보도 오류가 나타나게 된 데는 단순한 무책임성 내지 부정확성 이상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필자는 한국 언론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의 개입과<sup>23)</sup> 북한의 체제(regime)를 북한이라는 (실질적) 국가와 등치하는 관행적 편견이<sup>24)</sup>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종사자들은 북한 및 북한 체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치적 관점과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보도의 기초적인 사실성과 정확성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9월 30일 투고, 11월 14일 심사, 11월 22일 채택)

- 
- 22)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Newman et al., 2019).
- 23) 김창룡(2018: 27)은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을 “악마화, 범인화, 범죄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24) 이 잠재적 원인을 제시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은 이 논문에서 묘사한 보도 행태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오로지 북한의 정권 및 체제(레짐)를 그 국가 및 국민과 혼동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설명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에 동의하나, 북한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서 ‘체제’라는 말을 이처럼 임의로, 또 체계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언론 종사자들이 북한 체제와 국가를 따로 구분 짓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도 이것만으로는 “security guarantee”를 자연스럽게 직역하는 대신 굳이 “체제”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덧붙이는 패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 주요 용어

안전 보장, 체제 보장, 북한, 언론, 외신, 연합뉴스

## □ 부록

〈부록 1〉 관심기사와 관심밖기사로 분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구현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인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 분류기를 구현했다. 기본적으로는 문서 내에 특정 패턴의 문자열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한다. 분류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인사]”로 시작하는 제목의 기사는 제외한다. 모두 북한 관련 조직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관한 기사다.

“병역”을 포함하는 제목의 기사는 제외한다. 북한을 염두에 둔 한국의 안전보장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다.

나머지 기사들의 본문을 분석해 아래와 같은 두 단계 규칙을 적용한다.

1) “근거문장”이 하나 이상 포함된 기사를 “관심기사”로 분류한다. 근거문장은 아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구절(근거구절)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장이다.

- ‘체제’가 오고, 어떤 글자건 (공백 포함) 2글자 이내의 글자가 오고 (한 글자도 없을 수도 있음), ‘안전’, ‘안정’, ‘안보’, ‘보장’ 중 어느 한 단어가 온다. 단, ‘체제’ 바로 앞에 (띄어쓰기 허용) ‘평화’가 오지 않는다.
- 아래에 적은 <문자열 1> 중 어느 하나가 오고, 어떤 글자건 30글자 이내의 글자가 오고, ‘안전’과 ‘안보’ 중 어느 한 단어가 오고 (이 단어는 괄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글자건 10글자 이내의 글자가 오고, ‘보장’이나 ‘담보’가 오되, 이에 연이어 (띄어쓰기 허용) <문자열



2> 중 어느 하나도 오지 않는다.

<문자열 1> 북한, 대북, 북이, 북의, 비핵화, 김정은, 김 위원장, 김위원장, 제재완화, 제재 완화, 미북, 북미,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종전, 연락사무소, 트럼프, 폼페이오, 비건

<문자열 2> 이사회, 회의, 협의회, 협력위원회, 조약, 협약, 책, 이사국

2) 단, 위 규칙에 의해 근거문장으로 인정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문장 속의 근거구절이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절은 근거구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근거구절을 모두 잃게 된 근거문장은 더 이상 근거문장이 아니다. 근거구절들 중 일부만 잃고 일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근거문장은 여전히 근거문장이다.

- ‘아베’ 혹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 ‘불화수소’, ‘한일안전’ 혹은 ‘한일 안보’ 중 두 개 이상 포함한다(2019년 6월 이후 발생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기사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 ‘올림픽’, ‘신변’, ‘가족’ 중 어느 하나가 오고, 어떤 글자건 30글자 이내의 글자가 오고, ‘안전’, ‘안보’, ‘담보’ 중 어느 하나나 ‘경호’가 온다(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 신변 안전이나 개성공단 방북단 신변 안전 관련 기사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 ‘힘에 의해서만’이 들어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 발언을 전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협상의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 ‘미국’, ‘세계’, ‘자국’ 중 어느 하나가 오고, 연이어 ‘민’ 혹은 ‘인’이 오고, 어떤 글자건 30글자 이내의 글자가 오고, ‘안전’이 온다(미국민이나 세계인의 안전을 언급한 것이다).
- ‘수입제한’ 혹은 ‘수입 제한’이 들어 있다(수입제한조치가 북한 혹은 안전과 관련해 언급된 기사가 다수 있다).

두 단계 규칙 중 첫 번째 규칙을 표현한 정규표현식은 아래와 같다.

[<sup>^</sup>.\n]\*(?<!평화) ?(체제[<sup>^</sup>.\n]{,2}(안전|안정|안보|보장)) [<sup>^</sup>.\n]\* [<sup>^</sup>.\n]\*

((북한|대북|북이|북의|비핵화|김정은|김 ?위원장|제재 ?완화|미북|북미|미국  
 과 북한|북한과 미국|종전|연락사무소|트럼프|폼페이오|비전)[ ^.\n]{,30}((안전  
 |안보))>[ ^.\n]{,10}(보장|담보))(?(|이사회|회의|협의회| ?협력위원회| ?조약| ?  
 협약|책|이사국)))( ^.\n)\*

### 〈부록 2〉 컴퓨터 분류기의 성능 검증

표본 검사를 통해 실제 관심 기사를 관심 기사로 올바르게 판별하는 능력인 민감도(Sensitivity)와 실제 관심밖 기사를 관심밖 기사로 올바르게 판별하는 능력인 특이도(Specificity)를 추정함으로써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한다. 컴퓨터 분류기가 작업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 있는 네 묶음의 기사로부터 각각 100개 기사를 임의로 추출해 각 기사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를 사람이 판별하고 그 결과로부터 분류기의 성능을 추정했다. 기준시점인 2018년 3월 6일 이후 관심 기사는 96개, 관심밖 기사는 96개, 그 전 관심 기사는 92개, 관심밖 기사는 99개가 올바르게 분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균일한 사전확률(Uniform Prior)을 가정해 사후확률밀도를 산출하고 95% 최고사후밀도구간(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을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sup>25)</sup> 세로선은 최빈값(mode)으로 각 표본 내 민감도와 특이도다. 기준시점 전 기사에 대한 분류기의 민감도가 다른 지표들보다 약간 낮지만, 기준시점 전 기사들은 이 연구의 핵심 내용과 별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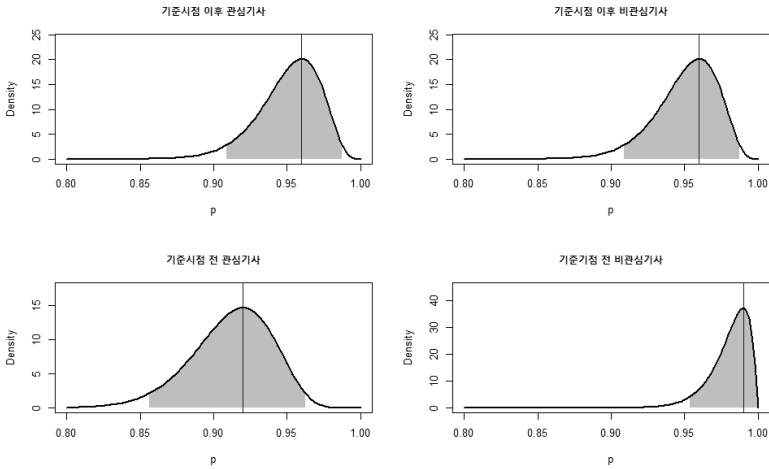
### 〈부록 3〉 인용문의 분류 기준

직접인용문: 따옴표를 치고 인물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문장 및 구절이다. 일부 기사의 경우, 큰따옴표 속에 들어 있는 문장이 실제로는 원발언의 여러 부분을 취합해서 만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문의 어느 부분이 인용된 것인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접인용으로 간주한다. 따옴표는 없지만 원래의 발언을 문장 그대로 통째로 옮긴 인용도 직접인용으로 간주한다. 단어 세 개 미만의

---

25)  $\beta_{a,b}(x) = \frac{1}{\beta(a,b)} x^{a-1} (1-x)^{b-1}$ 로 정의되는 베타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했다.

〈그림 7〉 컴퓨터 분류기의 민감도와 특이도 사후확률밀도



매우 짧은 직접인용문은 제외한다.

간접인용문/설명문: 원발언을 기자 본인의 말로 재전달하거나 다시 표현한 경우다. 간접인용문과 설명문은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서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한데 모아 분류한다. 단, 기자의 전언이 원문을 충실히 옮긴 것이 아닌 기자의 해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간접인용문/설명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연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 언론이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데, 인용된 원문과 의미가 다른 용어를 썼더라도 그것이 기자나 제삼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전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꼭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 보장’ 내지 ‘안전 보장’이라는 말이 쓰였어도 구체적으로 해당 원발언에 대해서 쓰인 것이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한 ‘간접인용문/설명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위 분류기준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 1) 직접인용문 vs. 간접인용/설명문의 구분

영문판 싱가포르 공동합의문 중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라는 부분을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이 맞교환된 것이다.

라고 쓴 기사가 있다(뉴스식별자 01100701.20180613000406002).

여기서 앞의 큰따옴표 속 문장은 직접인용문이며, 공동합의문 중 “security guarantee”를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옮겼다. 뒤에 오는 문장은 설명문으로, 공동합의문 중 “security guarantee”를 “안전 보장”이라고 전한 것으로 본다.

### 2) 간접인용문

위 1)에서 인용된 기사에서는 간접인용문/설명문 범주에서 설명문의 예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간접인용문의 예를 보인다. 2018년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의 발언에 대해서(E3.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쓴 기사가 있다(뉴스식별자 01100701.20190427000244001). 이것은 큰따옴표 없이 “~다”라는 접미사를 써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간접인용문으로 분류한다.

3) ‘체제 보장’ 및 ‘안전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간 설명문이라도 해당 발언 및 문건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인용문으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명문화해 강조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해 왔던 만큼 북한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언급은 일단 북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쓴 기사에서(뉴스식별자 08100101.20180612203216002),

첫 번째 문장의 “안전 보장”은 직접인용문으로, 맨 뒤 문장의 “안전을 보장”은 싱가포르 공동합의문 원문 해당 구절에 대한 설명문으로 본다. 맨 뒤 문장의 “체제 안전 보장”은 해당 원문에 대한 인용이나 설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언 인용기사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참고문헌

- 김창룡. 2018.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21~30쪽.
- Greenland, S., & J. Pearl. 2008. “Causal Diagrams.” in S. Boslaugh(ed.). *Encyclopedia or Epidemiology*. Los Angeles: CA, SAGE.
- Newman, N., R. Fletcher, A. Kalogeropoulos, and K. Nielsen. 2019.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9*.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Tucker, A. 2004. *Our Knowledge of the Past: A Philosophy of Histor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데이터

\* <데이터 2>부터 <데이터 8>까지의 데이터는 <데이터 1>을 거쳐 접근할 수도 있다.

<데이터 1> 통합 데이터(html),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top.html>

<데이터 2> 빅카인즈 검색 결과(엑셀 파일),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BigKindsResult.xlsx>

- <데이터 3> 빅카인즈 검색 결과 중 인터넷주소(url)가 누락된 기사(text 파일),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missing\\_url.txt](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missing_url.txt)
- <데이터 4> 빅카인즈 검색 결과 중 인터넷주소(url)로 원문을 내려받지 못한 기사  
 (text 파일),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unreachable\\_urls.txt](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unreachable_urls.txt)
- <데이터 5> 관심기사 목록(html),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all\\_intopic\\_articles.html](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all_intopic_articles.html)
- <데이터 6> 관심밖기사 목록(html),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all\\_outtopic\\_articles.html](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all_outtopic_articles.html)
- <데이터 7> 중요 발언과 문건,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quotations.xlsx>
- <데이터 8> 싱가포르 합의문을 인용한 영, 중, 일, 러 대표 언론 기사들의 바른  
 인용 여부(html),  
[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foreign\\_language\\_news.htm](http://cc.kangwon.ac.kr/~ckjeong/NKSecurity/foreign_language_news.htm)

□ Abstract

## Did the US Guarantee the ‘Regime’ of North Korea?

A Study of Systematic Citation Errors in South Korean News Media

Tay Jeong(Department of Sociology, McGill University)

Jeong, Choong Kyo(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hat is it that the United States is supposed to provide to the DPRK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 thorough review of the statements of the important policymaker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reveals that the concept, as well as the term that refers to it, has developed in three relatively clearly demarcated stages over the past two years. In the third stage, which corresponds to the period after June 2018, virtually all the parti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settled on the term “security guarantee” with the DPRK as the object. How, then, have the South Korean news media reported this term? This article reveals how it systematically distorted a key term in the

ongoing negotiations by systematically inserting the term “regime” as the object “security guarantee”.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critically analyzing patterns of news reportage that cite the term “security guarantee” included in the statements of key foreign officials during the third stage.

Key Words: Security guarantee, security assurance, Korean media, North Korean regime, Yonhap News